

09-01 (통권 1호)

2009. 6. 10



# 統一經濟

## 현안과 과제

-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UN 안보리 제재 영향과 대응 방향

## 차 례

###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UN 안보리 제재 영향과 대응 방향

I. 대북 제재안의 내용 .....	1
II. 대북한 파급 영향 .....	3
III. 향후 전개 전망 .....	5
IV. 남북 관계 영향과 대응 방향 .....	7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통일경제센터 :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3669-4182, sjhong@hri.co.kr)  
                  이해정 선임연구원 (3669-4487, hjlee@hri.co.kr)  
                  신힘철 연구원 (3669-4125, hcshin@hri.co.kr)

# Executive Summary

## □ UN 안보리 제재 영향과 대응 방향

### I. 대북 제재안의 내용

UN 안보리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가장 강력히 규탄(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하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 초안이 마련되었다. 새로운 결의안에서 UN은 더 이상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북한이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안보리의 제재 조치에는 금수대상 무기 확대, 북한 선박 검색 강화, 금융 제재 확대가 포함되었고, 추후 미국 자체적인 자산 동결 조치도 예상된다. 부문별로는 금수대상 무기 확대 조치에는 현재의 수출입 통제 대상인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품목에서 모든 무기로 확대 적용되었다. 북한 선박 검색 강화 조치는 WMD 관련 품목이 선적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영해 및 공해상에서도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금융 제재 확대 조치에는 인도적 목적이나 비핵화 촉진 목적을 제외한 모든 금융 지원이 금지된다. 이외에도 미국은 독자적으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 동결과 같은 추가 자산 동결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II. 대북한 파급 영향

북한은 이번 제재를 통해 무역에서 최소 13억 ~20억 달러에서 최대 32억 ~37억 달러의 손실과 함께, 해외 자금거래 중단이 예상된다. 이는 북한의 GNI 및 대외무역의 약 6.9~13.5% 및 40.0~78.8%에 해당한다. 부문별로는 첫째, 금수대상 무기 확대 조치와 관련하여 무역 거래 통제는 품목의 범위에 따라 2007년 5~22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는 북한의 GNI 및 대외무역의 약 2.0~8.5% 및 11.4~49.6%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북한 선박 검색 강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연간 10~15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북한의 무기 및 마약, 가짜 담배의 밀수출이 차단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 제재 확대 조치로 인해 아시아개발은행 (ADB)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신규 자금 지원이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추가 자산 동결 조치와 관련해서는 자금 동결 금액 이상의 제재 효과가 있어 손실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 III. 사태 전개 전망

UN 제재에 대한 북한의 대응 유형에 따라 긴장 유지 국면, 긴장 고조 국면, 위기 국면의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긴장 유지 국면 시나리오**는 북한이 ICBM 발사 위협 및 비난 성명 발표 등을 통해 긴장을 지속시키면서도 ICBM의 발사는 유예하고, 미국의 특사 파견 등을 통해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미 당국간 대화가 없고, 북한의 추가 도발 의지가 매우 높아 단기적으로는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긴장 고조 국면 시나리오**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미 일 등이 새로 마련된 UN 제재안을 '엄격 적용'함으로써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로,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 북한의 ICBM 발사 시기는 한미정상회담 (6. 16)이나 미국 독립기념일 (7. 4)을 전후로 예상되나, 안보리 제재 집행 움직임을 봐가면서 지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위기 국면 시나리오**는 북한이 ICBM 발사 후 추가로 핵실험 등을 강행하여 북미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로, 중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가 핵실험

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북한의 정권수립일(9. 9)이나 150일 전투가 마무리되는 당 창건 기념일(10. 10)을 전후하여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WMD관련선박의 검색 등 해상무력봉쇄(PSI) 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남북간 무력 충돌 가능성도 존재한다

#### IV. 남북 관계 영향과 대응 방향

**(남북 관계 영향)** 최악의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과 한국의 PSI 전면 참여 등에 반발하여 남북 관계의 전면 중단과 국지적인 군사 분쟁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 확대로 남북 경협에도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이다. 관광 중단의 장기화는 물론, 개성공단 사업도 통행 제한과 일방적인 계약 변경 통보 가능성이 존재하여, 투자 협력 사업이 자칫 폐쇄 및 고사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자 협력사업의 위축으로 위탁가공 및 일반 교역도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대북 진출 기업의 생산 및 수주 활동에 차질을 초래하여, 심각한 경영난과 재무구조 부실로 이어져 입주기업의 줄도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 잠재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재화됨으로써, 한국 경제의 회복 지연과 침체의 중장기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과거 연평해전과 핵실험·미사일 발사 때에는 남북 및 북미 당국간 대화가 진행 중이어서, 북한 도발에 따른 금융 시장 불안 요인은 미흡하였으나 지금은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상황이다. 경제 위기에 안보 위기가 겹쳐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됨으로써 대외 신인도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 외자 유치 감소 등이 우려된다. 또한 투자와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중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실업 증가 등이 우려된다

**(정부의 대응 방향)** 정부는 추가적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해서 대화 지속 노력을 한다는 기본 방향 하에 다음의 다섯가지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 해소 노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중·러 등 주변 4강들과도 다자간 양자간 상시 대화를 모색하여 북핵 협상 등에서 남한의 입장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남·북·중 혹은 남·북·러의 공동 경제·에너지 협력 방안 모색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남북 당국간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추가적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해서는 당국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동시에, 군사적 맞대응으로 인한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조건 없는 당국간 대화 제의와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전면적인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전달해야 한다.

**셋째, 남북 경협 기업의 피해 보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남북 경협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이거나 관련 사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남북 경협업체들의 일시적 경영난 해소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신속적 운용과 지원 대상 확대가 요구된다. 예컨대, 기업의 투자 자산을 통한 금융 활용 방안과 신용 보증 확대 등을 통해 대북 진출 기업이 국내 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자금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경제 안정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안보 위기가 겹쳐 국내 경제 침체가 중장기화되지 않도록 투자 심리 활성화와 외환·금융 시장 안정에 역점을 뒤야 한다.

**다섯째, 정치·사회 통합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보수·진보 진영 간의 남남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 주도의 열린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 I. 대북 제재안의 내용

### ○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가장 강력히 규탄 (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하는 새로운 UN 안보리 결의안이 사실상 타결<sup>1)</sup>

- '가장 강력한 규탄'은 안보리에서 특정 사안을 비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표현으로 2006년 10월의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서는 '규탄(condemn)'이었음
- UN은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북한이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명시
- 대북 제재의 주요 내용인 무기 수출입과 금융 제재, 공해상에서의 선박 검색은 모두 기존 안보리 결의안 1718호보다 강화

### ○ (제재 내용)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는 ① 금수대상 무기 확대, ② 북한 선박 검색 강화, ③ 금융 제재 확대로 구분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자산 동결 조치가 예상됨

- **금수대상 무기 확대** : 현재 수출입 통제 대상인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품목에서 모든 무기로 확대 적용
  - 무기금수 확대 적용은 주요국(P5+2) 모두 큰 이견 없이 합의
  - ※ P5+2 : 현재 대북 UN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7개국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한국, 일본을 의미
- **북한 선박 검색 강화** : 수출입 금지 품목이 선적됐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자국의 영해 및 공해상에서도 선박 검색 권한 부여
  - 선박 검색에 협력을 요구했던 기존의 제재안에 비해 검색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실제로 선박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 **금융 제재 확대** : 핵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대북 금융 지원이 금지
  - 즉, 인도적 목적이나 비핵화 촉진 목적을 제외한 모든 금융 지원이 금지

1) 2009년 6월 10일 현재, 비록 러시아가 본국과의 협의를 이유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지만, 본 보고서는 현재의 초안이 11일경에는 결의안으로 채택될 것을 가정하여 분석함

- 추가 자산 동결 : 미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추가하여 북한의 자산 동결과 같은 금융 제재 실시를 계획 중
  - 미국은 지난 2005년의 방코델타아시아(BDA)와 같은 북한의 자산 동결을 계획
  - 현재 미국 재무부는 자금 동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조지폐(슈퍼 노트) 거래 경로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자금 동결은 미국 단독으로 국내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2006년 이란에 적용)이나 '애국법'(2005년 BDA 적용)으로 제재 가능한 방법임

< UN 안보리 제재안 1718호와 新 제재안 비교 >

분야	2006년 결의안 1718호	신(新) 제재안	평가
금수대상 무기 확대	핵, 탄도미사일, 대량살상 무기 전차, 장갑차, 중화기,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모든 무기	○
선박 검색 강화	화물 검색 '협력 요구'	대량살상 무기를 선적한 증거가 있으면 영해 및 공해에서 검색 권한 부여	◎
금융 제재 확대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자금 차단	모든 금융 지원 금지 - 단 인도적 목적과 핵포기 목적은 제외	○

주 : ◎ 초강경 조치, ○ 강경 조치, △ 기존 수준

< 미국의 예상 독자 금융 제재안 >

주체	분야	제재 조치	평가
미국	금융 제재	미국의 권고로 주요 금융 기관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차단	◎

주 : ◎ 초강경 조치, ○ 강경 조치, △ 기존 수준

< 미국, 자산 동결 근거 법률 >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EPA)	미국 대통령이 '미국 안보·외교 경제에 현저한 위협이 될 경우' 대상이 되는 국가와 국민의 금융 거래 금지 자산동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
애국법 (Patriot Act)	정식 명칭은 '테러대책법'으로, BDA 사태 당시 BDA에 예치된 북한 자산을 테러 관련자금으로 지목하여 동결

주 : IEEPA :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 II. 대북한 파급 영향

### ○ (제재 조치 영향) 북한은 무역에서 최소 15억~20억 달러에서 최대 32억~37억 달러의 손실과 함께 해외 자금거래 중단이 예상된다

- 금수대상 무기 확대 : 무역 거래의 통제 품목 범위에 따라 5~22억 달러의 손실 발생이 예상되며, 이는 GNI 및 북한 무역의 2.0~8.5% 및 11.4~50.0%에 해당
- 이러한 차이는 이중 용도 품목의 무역을 제한할 때, 적용시키는 범위에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임
- 무역 제재를 강하게 적용(통제 품목 범위를 최대)할 경우는 화학공업제품, 금속·비금속, 기계·전기전자, 운수설비, 무기, 사치품 등이 모두 지정될 것으로 예상
- 무역 제재의 약한 적용(통제 품목 범위를 최소)은 화학공업 제품 중에서는 비료, 염료, 향료, 사진용 재료를, 기계·전기전자 제품에서는 음향·영상설비를, 운수설비에서는 차량, 철도관련 무역이 허용될 것을 가정
- 강한 무역 제재의 경우 2005~2007년까지 3년간 해당 품목의 평균 무역액(대외 무역+남북 교역)은 22억 달러에 이름
- 약한 무역 제재가 실시될 때, 지난 3년간 평균 무역액은 5억 달러임
- 이를 3년간 북한 GNI의 평균인 255억 달러와 비교하면, 약한 제재 시에는 GNI의 2.0%, 강한 제재 시에는 8.5%에 해당

#### < 약한 제재 시 통제 예상 품목의 총액 및 GNI 대비 비중 >

(단위 : 천 달러)

	2005	2006	2007	연평균	GNI 비중
총 교역	4,057,432	4,345,542	4,738,973	4,380,649	17.2%
화공제품	66,386	121,805	104,106	97,432	0.4%
기계·전기전자	129,679	148,630	127,863	135,391	0.5%
금속·비금속	262,088	223,081	244,588	243,252	1.0%
운수설비	76	506	30,457	10,346	0.04%
무기	0	26	20	15	0.0%
사치품	535	39,045	1,339	13,640	0.1%
소 계 (총교역 비중)	458,764 (11.3%)	533,093 (12.3%)	508,373 (10.7%)	500,076 (11.4%)	2.0%

자료 :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호

주 : 북한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 한국, 인도, 태국, 러시아, 일본과의 교역액임.

## &lt; 강한 제재 시 통제 예상 품목의 총액 및 GNI 대비 비중 &gt;

(단위 : 천 달러)

	2005	2006	2007	연평균	GNI 비중
총 교역	4,057,432	4,345,542	4,738,973	4,380,649	17.2%
항공제품	592,285	606,795	647,256	615,445	2.4%
기계·전기전자	782,350	837,578	685,526	768,485	3.0%
금속·비금속	570,863	694,512	819,871	695,082	2.7%
운수설비	68,176	70,735	99,229	79,380	0.3%
무기	0	26	20	15	0.0%
사치품	535	39,045	1,339	13,640	0.1%
소 계 (총교역 비중)	1,946,033 (48.0%)	2,248,691 (51.7%)	2,253,241 (47.5%)	2,172,047 (49.6%)	8.5%

- **북한 선박 검색 강화** : 연간 10~15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북한의 무기 및 마약, 가짜 담배의 밀수출을 차단<sup>2)</sup>
  - 현재 알려진 북한의 무기 밀수출 규모는 연간 10~15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 외에도 마약과 가짜 담배의 밀수출이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짐
- **금융 제재 확대** :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신규 자금 지원을 차단하는 효과
  - 북한 주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인도주의 및 개발 목적이나, 비핵화 촉진을 위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의 대출 및 지원이 불가능
  - 현재의 대북 금융 활동을 줄여나가도록 요구할 것으로 알려짐
- **추가 자산 동결** : 미국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 동결은 동결되는 금액 이상의 효과가 있음
  - 2005년 BDA 사태 당시 동결 금액은 2,500만 달러였으나, 미 재무부 발표 이후 북한은 세계의 모든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자금거래를 하지 못함
  - 그 여파로 2006년 상반기까지 전 세계 30여개의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축소 또는 단절했음
  -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결제가 불가능해진다면, 남북 교역 중 직접 전달되는 8억 달러 규모의 개성공단 교역액을 제외한 나머지 위탁 가공 및 일반교역 10억 달러는 중단될 가능성 있음(2008년 기준)

2) 2009년 4월 8일 브루스 벅틀 미 해병대 지휘참모대학 교수는 미국기업연구소(AEI)가 마련한 북한 로켓 발사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이 지난해 탄도미사일 수출로 벌어들인 수입이 15억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출처] PSI 전면참여, 한반도에 떠도는 불길한 먹구름-최재천, 민중의소리 기고)



### Ⅲ. 향후 전개 전망

○ UN 안보리 제재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따라 ① 긴장 유지 국면 ② 긴장 고조 국면 ③ 위기 국면의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음

#### ① 긴장 유지 국면 : ICBM 발사 유예 및 타협 시도 시나리오

- 북한이 ICBM 발사 위협 및 비난 성명 발표 등을 통해 긴장을 고조하면서 발사는 유예하고, 미국의 특사 파견 등을 통해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음
- 북미 고위급 대화의 진전으로 평화협정 체결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대북 경제 지원과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논의로 발전되는 경우임
- 이 경우에도 북한의 비난 성명 발표와 동·서해상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북미 당국간 대화가 없고, 북한의 추가 도발 의지가 매우 높아 단기간 내에는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 ② 긴장 고조 국면 : ICBM 발사 시나리오

-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미·일 등이 새로 마련된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로, 현재로는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은 ICBM 발사와 북방한계선의 무력화 시도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해, 미·일과 국제사회는 UN 제재조치를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
- 북한의 ICBM 발사 시기는 단기적으로는 6월 중순~7월초로 예상되나, 지체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
- 6월초에 김 위원장의 동창리 및 인근 지역 방문설이 있어 이르면 한미 정상회담(6. 16)이나 美 독립기념일(7. 4)에 발사하거나, UN 안보리 제재 집행 움직임 등을 보가면서 1~2개월 후로 지체될 가능성도 존재

③ 위기 국면 : ICBM 발사후 추가 핵실험 시나리오

- 북한이 ICBM 발사 후 추가로 핵실험 등을 강행하여 북미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로, 중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북한의 추가 위기 고조에 대해, 국제사회는 UN 결의 등을 통한 추가 제재는 물론, 정밀 타격 등 군사적 제재 가능성도 고려할 경우임
- 추가 핵실험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북한의 정권수립일(9. 9)이나 150일 전 투가 마무리되는 당 창건기념일(10. 10)을 전후하여 강행할 가능성 존재
- 이 경우, 대량살상무기 관련 선박의 검문·나포 등 해상 무력 봉쇄(PSI) 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남북간 해상 무력 충돌 발생 가능성도 존재

< 상황별 단기 시나리오 전망 >

		북미·북핵 관계	남북 관계	가능성
북한 행동 유형	긴장 유지 국면 (타협 시도)	- UN 제재, 느슨한 적용 - 북미 대화 진전 특사파견	- 남북 교류 진전 없음 - 비난 성명	매우 낮음
	긴장 고조 국면 (ICBM 발사)	- UN 제재, 엄격한 적용 - 북미 대화 교착	- 남북 교류 중단 - 북한, 동·서해상 도발	매우 높음
	위기 국면 (추가 핵실험)	- 미국 요격 시도 -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 북미 대화 차단	- 남북 교류 전면 중단 - 해상에서 군사적 충돌	높음

○ (종합 전망) 일단은 긴장 고조 국면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남북 관계는 북미 관계 진전과 무관하게 대화 중단 사태의 중장기화와 국지전 가능성이 우려

- 북한은 타협 국면으로 조기에 전환되지 않으면, 동·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국지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상존함
- 특히, 서해상에서의 단거리 미사일과 해안포 발사 등의 도발을 통해 북방한계선 무력화를 시도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음

## IV. 남북 관계 영향과 대응 방향

### 1. 남북 관계 영향

#### ○ (남북 경협) 최악의 경우,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남북 대화와 남북 경협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직면할 우려

- 남북 관계 :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과 한국의 PSI 전면 참여 등에 반발하여 남북 관계 전면 중단과 국지적인 군사 분쟁 가능성이 존재
  - 남북 교류 단절 확산 : 정치·군사 부문의 단절이 경제 및 사회 문화 교류 전반으로 확대될 우려
  - 남남 갈등 심화 : 북한의 도발로 인한 보수·진보 진영 간의 남남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남북 경협 :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 확대로 경협 사업이 전면 중단될 우려
  - 관광 중단의 장기화는 물론, 개성공단 사업도 통행 제한과 일방적인 계약 변경 통보 가능성이 존재, 투자 협력 사업이 폐쇄·고사 위기에 직면
  - 투자 협력사업의 위축으로 위탁가공 및 일반 교역도 급격히 위축 우려
  - 이는 대북 진출 기업의 생산 및 수주 활동에 차질을 초래하여, 심각한 경영난과 재무구조 부실로 이어져 줄도산이 불가피할 전망

#### ○ (한국 경제)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 잠재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재화됨으로써, 한국 경제의 회복 지연과 침체의 중장기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

- 대북 포용 정책 하에서의 북핵 및 미사일 리스크는 '상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남북 관계 단절속에서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과거 북한의 연평해전과 핵실험·미사일 발사 때에는 남북 및 북미 당국간 대화가 진행 중이어서, 북한 도발에 따른 금융 시장 불안 요인은 미흡
- 재무 상환 부담 증가 : 경제 위기에 안보 위기가 겹쳐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됨으로써 대외 신인도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 외자 유치 감소 등이 우려
- 경제 심리 급랭 : 투자와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중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실업 증가 등이 우려

## 2. 정부의 대응 방향

### ○ (기본 방향)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와 추가적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해 대화 지속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

- 첫째, 국제 공조 강화로 한반도의 긴장 해소 노력 증대
  - 굳건한 한미 동맹 강화는 물론, 중·러 등 주변 4강들과도 다자간·양자간 대화를 모색하여 북핵 협상 등에서 남한의 입장이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
  - 특히 남·북·중 혹은 남·북·러의 공동 경제·에너지 협력 방안 모색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
- 둘째, 남북 당국간 대화 채널 복원
  - 추가적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해 남북 당국간의 대화 채널 복원에 역점
  - 군사적 맞대응으로 인한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최대한 자제
  - 조건 없는 당국간 대화 제의와 공식·비공식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전면적인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전달
- 셋째, 남북 경협 기업의 피해 보상 대책 마련
  - 남북 경협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관련 사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
  - 특히,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남북 경협업체들의 일시적 경영난 해소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신축적 운용과 지원 대상 확대
  - 기업의 투자 자산을 통한 금융 활용 방안과 신용보증 확대 등을 통해 대북 진출 기업이 국내 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의 자금 확충 방안 강구
- 넷째, 경제 안정 기반 강화
  - 글로벌 금융 위기에 안보 위기까지 겹쳐 국내 경제 침체가 중장기화되지 않도록 투자 심리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역점
  - 특히 국내 경제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환·금융 시장 안정에 주력
- 다섯째, 정치·사회 통합 노력
  - 보수-진보 진영 간의 남남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 주도의 열린 논의의 장을 마련